

“산켄전기 직접 교섭 나올 때까지 상경 천막농성”

한국산연지회 투쟁 580일 ... “외투자본 먹튀 방지법 제정 투쟁 벌이자”

경남 창원 한국산연의 위장폐업에 맞서 580일째 투쟁 중인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가 일본 산켄전기 자본을 상대로 끝장투쟁을 선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가 2월 9일 투쟁거점을 경남 창원에서 서울 강서구 산켄코리아 영업소 앞으로 옮겼다. 금속노조는 이날 지회와 함께 국회 앞에서 ‘외국자본의 투기와 먹튀·부동산투기·국부유출방지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벌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한국산연지회는 산켄코리아 영업소 앞으로 이동해 ‘한국산연 위장폐업 청산철폐, 해고자복직을 위한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열고, 천막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한국산연 동지들이 외국자본의 탐욕과 이윤 축적에 고통 받고 있다”라며 “이제 야만을 종식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제조업 상당수 사업장에서 외투자본의 횡포로 노동



자들이 시름하고 있다” 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들 투쟁에 화답해 법 개정애 나서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 고용안정 위협 시 외국인 투자 제한 ▲외국인 투자 위원회 구성에 노동자 대표 참여 의무로 반노동자 행위 사전 방지 ▲부정행위 시 특혜 등을 환수 등 세 가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과 사무처,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 경남과 울산에서 상경한 금속노조 조합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한국산연지회의 끝장투쟁에 힘을 보탰다.

오해진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장은 투쟁을 시작한 지 578일이 넘었

다면서 “오늘 우리는 마산 현장 투쟁과 병행하기 위해 서울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한다”라고 선언했다. 오해진 지회장은 “우리는 산켄 자본이 위장폐업을 철회하고 직접 교섭에 나설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투쟁사에서 “남들처럼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싶은 한국산연 노동자들의 소박한 꿈을 일본 산켄 자본이 짓밟았다. 정부는 방관하고, LG 자본까지 개입해 금속노조 푸른 깃발을 내리려 한다”라고 분노했다. LG는 각종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산켄전기에서 납품받고 있으며, 국내에 합작회사로 연구소를 차려 공동 운영 중이다.

조합원으로서 한국산연지회 투쟁을 함께 한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돈 몇 푼 받으려고 하는 투쟁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라면서 “끝이 어떨지 장담할 수는 없다. 끝까지 싸워 산켄 자본 반드시 처벌하겠다. 함께하는 동지들을 믿는다”라며 끝장투쟁을 결의했다.

금속노조, 20만 총파업 투쟁 본격 논의 시작

8~9일 노조 중앙집행위 회의 ... 12기 1년 차 사업·투쟁·예산·임단투 계획 토론

금속노조가 2월 8일부터 9일까지 충북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에서 12기 3차 중앙집행위를 열고, 1년 차 사업계획, 투쟁, 임단투 계획을 토론했다.

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중집을 시작하며 “2022년 투쟁의 깃발이 올랐다. 141차 중앙위원회, 56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만 총파업을 결의하고 투쟁으로 2022년을 돌파하자고” 라고 독려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월 10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룰 2022년 사업계획을 설명한 뒤 노조 중집들의 의견을 듣고 질의에 답했다.

노조는 이날 중집 안건으로 141차 중앙위원회 상정 안건 논의 건, 56차 정기대의원대회 준비 건, 12기

감사위원 선거 일정 확정 건, 2월 투쟁계획 건 등을 다뤘다.

노조 중집들은 이날 회의에서 141차 중앙위원회와 56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할 11기 2년 차 사업평가, 12기 1년 차 사업계획 안과 예산안, 2022년 임단투 계획에 관한 안건을 집중 토론했다.

노조는 이날 회의에 2022년 핵심 구호로 ‘3대 의제 쟁취, 20만 총파업으로 돌파’ 를 내걸었다. 노조는 이에 따른 2022년 3대 의제로 ▲노동중심 산업전환 ▲재벌중심 독점체제·불평등 타파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노조 할 권리 쟁취를 내세웠다.

노조는 중집회의에 ▲고용보장·좋은 일자리 창출 위한 신임 정부

차원 대책과 제조업 전망 마련 ▲재벌 이익 중심 산업전환 중단·노동자 참여-노동중심 산업전환·논의 구조 변경 ▲제조업 변화·위기가 노동자 삶과 지역·사회 문제임을 한국 사회에 알림 ▲미조직 제조업 노동자 요구 쟁취 등을 위해 20만 총파업을 벌인다고 설명했다.

노조 중집위원들은 총파업의 목적과 방식, 시기에 관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노조는 3차 중집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2월 15일 4차 중집에서 추가 논의해 20만 총파업·사업계획·예산·임단투 계획 등을 2월 23일 여는 노조 141차 중앙위원회 ‘56차 정기대의원대회 상정 안건 승인 건’ 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권 박탈 시도

사업장 규모 차별 없는 휴게시설 의무화 촉구 기자회견 ... “20인 이상 사업장 5.8% 불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따지지 말고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금속노조와 함께 2월 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게실 설치 의무기준을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정부가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차별한다고 꼬집

었다.

정부는 올해 8월 사업장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앞두고, 휴게실 설치와 관리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휴게 시설 의무기준을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와 노동부 관계자 면담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

산업단지공단 국가산업단지 정보 2021년 11월 산업동향 통계표에 따르면, 전국 국가산업단지 업체당 평균 노동자 수는 17.4명이다. 서울

11.4명, 인천 남동 14.1명, 반월 13.2명, 시화 11.5명 등이다. 정부안대로 기준을 만들면 공단 대부분 업체가 휴게실 설치 의무를 피할 수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휴게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더욱 필요하다” 라면서, “20인 이상 설치 의무화는 근로기준법, 공휴일, 산안법 등 각종 법 적용에서 소외당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골을 더욱 키우는 일이다” 라고 비판했다.